

세상을 멈춰서 열사의 한을 풀자!



“슬퍼하는 대신 일어나 싸워주십시오” - 열사의 부인 하수진 씨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박종태 열사
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거꾸
로 가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의해 죽임을 당
한 것이며 또 다른 노동자가 수레바퀴에 깔
리기 전에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범죄자는 바로 이명박이다. 박종태 열사가
유서에서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 등장 이
후 “극우보수 꼴통들이 이번 참에 아예 지
네들 세상으로 바꿔 버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는 실종된 지 오래됐고,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거나 고분고분 노예
로 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명박이 살인교사범이라면 살인범은 대
한통운이다. 금호그룹 산하 대한통운은 건
당 9백20원 하던 운송수수료를 30원 인상
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삭감하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 78명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집단 해
고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가
입 금지 각서를 강요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
동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폭력 경찰은 이런 대한통운
의 뒤를 봐주는 용역깡패였다. 박종태 열사
는 경찰의 탄압에 대해 “공권력의 잔인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속에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절규했
다.

무엇보다 “경찰한테 힘없이 밀리는 동지
들을 지켜보면서 역장이 무너지더라”는 박
종태 열사의 한맺힌 목소리는 우리의 가슴
을 무너지게 한다.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야
산에서 동료들이 경찰에게 두들겨 맞고 끌
려가는 것을 지켜보던 박종태 열사의 심정
이 어땠는지 생각하면 역장이 무너진다.

그런데 이런 공격은 지금 대한통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부
터 전국 곳곳에서 운송료 삭감과 화물연대
탈퇴 공작이 벌어졌다. 더구나 이런 공격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
하는 전반적인 공격의 일부였다.



최저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대량해고,
임금 삭감, 청년 인턴 확대 등 이명박 정부
는 노동자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한푼이라
도 더 빼앗아 재벌 부자들의 공간을 채우려
고 눈이 뒤집혀 있다. 이것이 낱을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언론 장악 시도와 반민주적
탄압도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은 최근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
대과제”라고 못박았다. 언제든지 손쉽게 노
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돌릴 수
있게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공격의 걸림돌이 될
민주노총 죽이기도 계속하고 있다. 이미 1년

반 전에 민주노총을 탈퇴했던 현대건설 노
조를 새삼 보도하며 ‘민주노총 탈퇴 도미
노’라는 식으로 과장보도하는 조중동은 이
것을 돕는 것이다.

특히 화물연대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표적이 돼 왔다. 지난 몇 년
» 뒷면으로 이어짐

특수고용직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박종태 열사 투쟁의 배경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놓여 있다.

경총은 지난해 10월 15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하나 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니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였다.(같은 날 건설 기업들도 건설노조의 텀프와 레미콘 조합원 자격 관련 진정을 냈다.)

노동부는 올 1월 초 이 진정을 그대로 수용해 운수노조와 건설노조에게 각각 해당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라는 '자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 때문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정식 법률 명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일은 하는데, 근로계약이 특수 형태라 노동자는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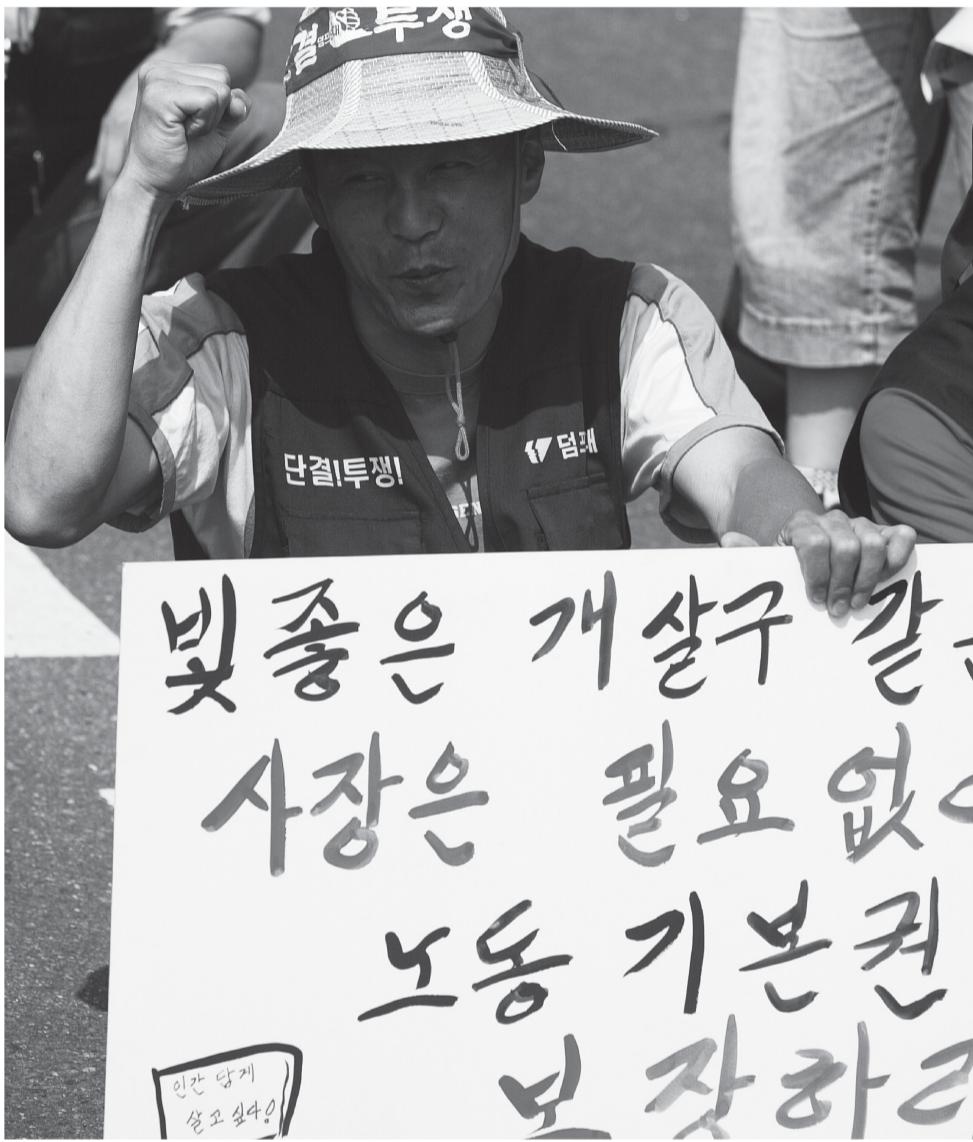
이 탓에 실제로 종속적 관계에서 업무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데도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마저 받지 못한다. 텀팔아 사용자 책임도 면제되므로 예를 들어, 4대 보험 혜택은 꿈도 꾸기 힘들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통 받고도 노조 설립을 통한 권리 보장을 쟁취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대접 받지 못하니 공공노조 간병인분회 정금자 위원장은 "살아 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특수고용직의 부당한 법적 지위 문제를 쟁점화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의 전진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5월 13일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

나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관련법안(김상희 발의)은 특별법 형태인데다 노동자성 인정을 별도 심의기구로 인정받아야 하며,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내용이다. 더구나 그 간담회에서 한 택배분회 조합원이 지적했듯이 "박종태 열사의 죽음에는 지난 10년 민주당 여당 시절 당시의 노동정책도 무관하지 않"고 "민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면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을 통해 발의한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자 지위(와 사용자 책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특고노동자들의 숙원을 풀 수 있는 대안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압도 다수인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열쇠는 지금 당장 벌어져야 할 우리 투쟁의 크기와 힘에 있다.

» 앞면에서 이어짐

간 화물연대, 텀프연대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불굴의 투쟁을 이어 왔고 조금씩 권리를 되찾아 왔다. 특히 화물연대는 지난해 촛불항쟁 때 '국민지지 1호 파업'과 승리를 통해 이명박에게 통과한 한 방을 먹이기도 했다. 이명박은 이러한 진군이 계속되길 바라지 않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확산되는 것은 더욱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화물연대 등에 대한 온갖 아비한 탄압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는 상급노조인 운수노조와 건설노조의 설립 신고증 반려 위협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논의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려고 한다.

대대적인 반격

이런 온갖 탄압과 반동 시도 속에 박종태 열사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열사의 부인인 한수진 씨는 "떨췄던 두 아이 아빠를 그리고 단란했던 한 가정을 이렇게 만든 금호자본과 그것을 방조한 정부가 조금이라도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하루빨리 나타나서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금호자본은 꿈쩍도 않고 있다. 지난 토요일 민주노총의 추모집회 때도 폭력 경찰은 우리를 막아섰고 경찰서장은 "[행진을 중단하고 이동하지 않으면] 밥줄이 끊겨요"라며 노동자들을 협박했고, "개만도 못하다"며 멸시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돼야 한다. 열사의 부인인 한수진 씨도 "슬퍼하는 대신 일어나 싸워주세요. 고인의 유언대로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대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맨 앞에 나서야 한다. 정호희 운수노조 정책실장이 말했듯이 "지난해에는 촛불 소녀들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면 이제는 조직된 노동자가 앞장서서 항쟁의 주역이" 돼야 한다.

강력한 파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물류를 멈춰 멈추어 세상을 바꾸자. 화물차 시동을 걸고 해방을 향해 달려라. 치욕에 울부짖던 날. 그날을 기억하라!"(화물연대 진군가)는 노래소리가 지금처럼 가슴에 와닿는 때가 없었다.

대한통운이 노사합의 파기 이후 자행한 집단해고, 화물연대 불가입 각서 요구 등은 결국 노조 파괴 수순이었다. 화물연대 파괴 시도의 발단이 된 노동부 진정서는 경총이 제출했고, 이를 수용해 와해 공작을 돕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은 촛불 운동 한복판에서 이명박 정부를 위협했다. 촛불 운동 덕에 파업 지지가 전국에서 빗발쳤고 파업은 승리했다. 화물연대 파괴 시도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사장들이 지난해 밀렸던 세

력관계를 만회하려는 반격의 일부다.

다행히 박종태 열사 투쟁은 대중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며 전국적 초점이 되고 있다. 가장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라 국민적 지지도 높다.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대한통운 불매 운동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지난 4.29 재보선의 참패 이후 심각한 분열과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친이와 친박은 이미 두 나라당이 된 지 오래다.

이 상황에서 박종태 열사 투쟁은 이명박의 반동적 공격에 맞서는 전체 노동자들이 반격과 연대 투쟁의 기점 구실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화물연대 조합원 총회는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정해야 하고 그럴 것이

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한통운에 대한 원직복직 요구뿐 아니라 노동3권 보장이라는 대정부 요구를 내걸고 시급히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운송료 삭감과 노조 탄압은 대한통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며 무엇보다 노동3권이라는 특수고용직 모두의 사활적인 요구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대한통운과 정부가 계속 문제를 외면할 경우 이 문제를 서울로 가져가서 더 큰 투쟁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같은 특수고용직인 건설노조는 이미 5월 27일 2만 5천 명이 참가하는 서울 상경 파업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쌍용차에서도 3천여 명 대량해고에 맞

서 전면적 점거파업에 들어갈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완성차 4사 노조는 쌍용차 대량해고에 맞선 연대파업을 약속했다.

민주노총과 운수노조, 금속노조는 이 투쟁들을 하나로 묶어 이명박의 반동적 공격을 분쇄할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묶인다면 그것은 가공할 힘으로 이명박 정부를 위협할 것이 명백하다. 그 힘은 이명박 정부의 반동적 정책들과 정권의 존재 기반을 뒤흔들고 박종태 열사가 그토록 원했던 "힘있는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이명박의 반민주 반서민 친재벌 정책과 반민주적 탄압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단체들도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